DJ '독재 발언' 민주당 득실은

'지지층 결집' 좋지만 '상왕정치' 부담

反 MB 구축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 유리
"민심 얻을 수 있는 쇄신안 등 마련 필요"

'독재자'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득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현재 시국을 '독재의 위기'로 규정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집결된 과거 지지층과 '반(反) MB 민심'을 한 데 묶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을 반 MB 전선으로 확실하게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확실해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후 정국에서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장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외부 돌발변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은데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상 민주당이 얹혀가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내부 동력이 아닌 두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인한 지지층 결집과 지지도 상승 등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바라보고만 있기보다는 6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6월 임시국회는 물론 자체 쇄신안 등을 마련,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내부 분열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여권이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나타낸 데 이어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이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빠져 나오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보다 강경하게 여권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왼쪽부터)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1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 실천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국회 갈수록 '첩첩산중'

미디어법 등 현안 법안 돌파구 꽉 막혀
與 "무조건 등원해야" 野 "민심 직시하라"

6월 임시국회를 놓고 여야가 전혀 타협하지 못하면서 각종 현안 처리 문제가 첩첩산중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개회가 되더라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구성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여권이 전혀 성의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국 돌파의 기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권은 야당에 등원 명분을 제공하고 이에 야당이 국회에 입성, 제도권 내에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현안들을 논의하는 성숙한 정치권의 모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법 = 지난해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을 불러왔던 '시한폭탄'같은 법안들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디어법은 융합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신문과 방송이 발전하는 산업적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악법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답"이라고까지 말했다. 당내에선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을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미디어법 추진 포기 약속을 받아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조문정국을 거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법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미디어법은 언제든지 여야의 정면충돌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7월부터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종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에 이런데도 국회에서는 법안 상정도 안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늦춰 결국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親盧, 멍에 벗고 도약하나

'박 게이트' 종결… 유시민 등 재기 관심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서 친노(親盧) 진영의 정치적 재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어려운 국면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구속수감 중인 이광재 의원의 경우 최근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일부 진술을 번복, 주변에선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서갑원 의원도 불구속 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친노의 '상징'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2위로 뛰어오르고 공동 장의위원장을 맡은 한명숙 전 총리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폐족' 위기에 내몰린 친노세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과 유지 계승을 명분으로 세 결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DJ 발언 보수-진보 힘겨루기로

전여옥 지지 모임 "자살하라"
민주국민회의 "망발 넘어 패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최근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보수와 진보 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보수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자택 앞 입구에서 DJ 발언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인공기 및 피켓을 불태웠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팬 클럽인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전지모)의 최정수 회장은 지난 12일 '전지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 한번 한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명의 자살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라며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화합을 주장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하고 더 나아가 현 정권에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김대중씨는 국가 내란죄로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14일 오후 7시30분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촛불시민연석회의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여중생 추모 촛불 문화제가 열렸으며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진보 개혁 진영 인사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가 개최됐다.

또 오전 10시 반에는 서울 통일연대 회원 100여명이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운동기간 선포식을 가졌다.

나아가 극우진영의 DJ 발언 규탄 움직임에 대해 민생민주국민회의 안진걸 정책팀장은 이날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파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말한 것을 국가내란죄로 몰아붙인 것도 황당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살' 운운한 것은 망발을 넘어 패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홍준표 쇄신대상 1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박 전 대표를 비난한 홍준표 전 원내대표를 '쇄신대상 1호'라며 맹공을 퍼부으며 반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쇄신대상 1호는 홍준표 전 원내대표 같은 당직자로, 이런 분들이 다시는 당직·공직에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쇄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주장은 홍 전 원내대표가 전날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 이후) 패자의 길로 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전 원내대표가 2005년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혁신안을 마련했음을 거론하며 "혁신안은 손색없는 선진정치의 교본"이라고 평가한 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그 규정은 거의 사문화 됐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홍 전 원내대표의 수수방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권 후 혁신안 실현을 주도할 실세 원내대표가 됐음에도 당청분리는 고사하고 '청와대 시녀' 노릇에 앞장섰다"며 "총선과 재보선 공천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편승했고,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불법 거적시위에 동원시키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